

기획

제47대 총학
공약점검

#. 48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 47대 총학도 이제 임기가 1달 반 남짓 남아있다. 지난해 총학 선거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오늘의 경희'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이정이(아동가족학 2010)회장과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전체 유권자 51.30%가 참가한 가운데 찬성표 75.0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전체 유권자 중 52.0%를 얻은 '친KNU' 선본의 김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과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이 32.3%를 얻는데 그친 'Klass Up' 선본을 누르고 당선됐다.

양 캠퍼스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총학의 활동이 학생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신문은 공약 이행정도를 점검해보기로 했다.

‘공공 기숙사’·‘SNS 사업 보고 강화’ 이행, ‘장학문제 개선’ 미이행

서울캠퍼스 총 학생회 공약 점검

이수형 기자 dltdbd112@knu.ac.kr

【서울】 제47대 총학이 성공적으로 이행한 공약은 대형강의 축소·폐지와 공공기숙사 신축지연 해결을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대형강의 축소 및 폐지’ 공약은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수강인원 130명 이상인 ‘대형강의’를 증설한 것에 따른 대응이었다. 실제로 2014 학년도 1학기에는 후마의 대형강의 수가 1 개에서 38개로 대폭 늘었다. 이후 학생·교수·후마 행정실이 대형강의를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학기 후마 강좌 5개가 수강신청 이후 갑작스레 대형강의로 바뀌면서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후마 행정실 측은 후마니타스 교육협의 간담회에서 ‘2016학년도 1학기는 절대로 수강인원 100명이 넘는 강의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합의내용이 쉽게 깨진 것으로 보아, ‘학생들 의견수렴’, ‘교무팀과 TF구성’과 같은 단발성 공약은 이행에 성공했으나 큰 실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총학은 ‘공공기숙사 신축’ 공약을 내걸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동대문구청에 공공기숙사 건축인허가 승인을 요구했다. 작년 SPACE21 건설사업단은 동대문구청이 민원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자,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신축결정 이후 총학은 SPACE21 소통위원회에서 ‘공공기숙사내 상업시설에 대한 제안’ 등과 같은 기숙사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남은 임기동안 제안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총학은 ‘대학평가 대응’ 공약의 일환으로, ‘언론사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총학 이정이(2012 아동가족학) 회장은 “대학생답고 재치 있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총학은 대학이 언론사 평가를 진행하는 신문사에 지출하는 광고비 공개를 요구했고, 현재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학생회 새로나기’
‘장학개선 토론회’ 공약 미이행

약속을 지킨 공약이 다수지만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학생회 새로나기’가 있다. 총학은 ‘학생회 새로나기’ 공약을 통해 자치회비 감사를 강화해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난 9월 열린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회운위)에서 이정이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생회가 자치회비를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며 “이는 학생회의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회운위 전 구성원은 ‘자치회비 회계감사 확대시행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자치회비 회계감사 확대시행 세부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제2차 전학대회가 성원 미충족으로 열리지 못해 자치회비 회계감사 확대시행을 위한 세칙개정이 무산됐다. 이 회장은 전학대회 개최 실패를 아쉬워하면서도 “세칙개정은 실패했지만 자발적으로 감사에 지원한 단과대와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학생참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차기 총학생회에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취·하숙생들의 권리 되찾기’를 목표로 계획한 ‘주거권 실현’ 공약 역시 반쪽



지난 7월 17일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제5차 회의에서의 모습

짜리 이행에 그쳤다. 총학은 ‘자취생 권리 찾기1,2’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작성·임대차 거래 피해대처 방법을 담은 컨텐츠를 페이스북과 메일을 통해 제공했다. 그러나 ‘회기동 착한 자취·하숙방 콘테스트’는 무산됐다.

‘장학문제 개선’ 공약 중, 총학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이 높은 장학개선 토론회 역시 개최되지 못했다. 지난 1월,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계정에 지난 학기 총학 소속 임원이 장학금을 대리수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밝은사회장학’이 개인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휴학’과 ‘졸업유예(8학기 초과 재학)’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임원들이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대리수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총학 이 회장은 당시 “장학금 대리수령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장학금 지급의 투명화 노력이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문제도 되

총학 “학생들과의 소통이

미비했던 것에 아쉬움이 크다”

총학은 주요공약 외에 역사 내일로, 〈힘내라, 장그래!〉 프로젝트, 노후캠퍼스 안전점검요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경희가족 한마당, 황금마차 수익기부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은 올해 총학 활동에 대해 “소통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구상했지만, 부득이 실현하지 못했다”며 “학생들과의 소통이 미비했던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한대련 탈퇴’·‘수강신청제도 개선’ 공약 이행, 학생회 예산공약은 미흡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공약 점검

강규연 기자 jennifer024@knu.ac.kr

【국제】 47대 총학생회(총학)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탈퇴 여부에 관한 총투표 ▲수강희망과목담기 제도 개선 ▲영어지원금 확대 및 다변화 등의 공약을 달성했다. ▲장학금제도 확대 및 개선 ▲기숙사 기본권 확보 등의 공약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자치회비 및 학생회비 내역 후퇴했다고 평가 받는다.

선거 당시 친KNU선본으로 출마했던 총학은, “대학생연합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동의 없는 의견’을 표출하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탈퇴 여부에 대해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25일 총학은 투표율 50.32%를 기록한 ‘한대련 탈퇴에 대한 학생총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찬성 69.6%였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총학은 한대련 의장인 전남대학교 김한성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3년 총여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응용과학대학 학생회에 이어 총학 역시 탈퇴함으로써 ‘한대련’과의 관계는 완전히 청산됐다.

또 다른 주요공약인 수강신청제도의 개선도 이행됐다.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은 후보 당시 “수강희망과 목담기가 강좌의 개·폐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어렵다”며 “희망과목담기 제도를 보완해 수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서도 기존 수강희망과목담기의 피드백이 없음을 문제 삼아 이를 개선해 원활한 수강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15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에서 수강희망과목담기를 강의수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희망과목담기’와 수강신청편의를 위한 ‘예비과목담기’로 이원화해 운영했다.

이 밖에 주요공약으로 나온 ‘등록금 동결’, ‘영어지원금 확대’ 공약 역시 이뤄졌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의 경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정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다수다.

‘영어지원금 확대’의 경우 기존 ‘토의시 험응시료’만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어학시험 및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술·디자인대학의 경우 올 8월부터 기존 토의 지원금제도를 폐지했다.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윤수연 직원은 “일률적으로 토의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논의됐다”며 “기존 토의지원금 예산을 현재 학생 취업프로그램에 활용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단과대학도 내년 1학기부터 기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학생회,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기숙사 기본권 확보’ 공약은 아직 진척 사항이 없다. 친KNU선본은 공약집에서 “5가지 상점조항에 비해 별점조항은 40가지로 규제가 심하다”며 “학우들과 함께 기숙사 규칙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별점 조항과 비교했을 때 체감 가능한 변화는 없었고 몇몇 단서조항이 추가됐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총학 김



지난 3월 24~25일 총 투표 실시 모습

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은 “현재 제시하는 몇 가지 애니 있다”며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회비 및 학생회비 내역 전 공개’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약집에는 “학우여러분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학교 내의 자치기구 및 각 학생회들의 예·결산 공개를 의무화하여 더욱 깨끗한 자치회비, 학생회비 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나, 우리신문이 지난 3월과 7월 보도했다시피 총학 스스로도 자치회비와 학생회비 사용에 대해 제대로 된 공개가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또 자치회비 내용이 투명하지 않아 검찰에 민원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지난 9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결산안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김 회장은 “자치회비 결산안을 학생회칙 167조에 따라 한 학기를 기준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서 학기가 끝나고 올리려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존 ‘총학생회 회칙의 모호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더욱 깨끗한 자치회비, 학생회비 사용을 하겠다”라는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SPACE21의 빠른 추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신문이 지적했다시피 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었다. 더욱이 SPACE21 사업은 지난 3월에 시작된 종합체육관 건설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건물조감도조차 나오지 않았다. 또 기존 학생회에서 ‘은밀하게’ 써왔던 총학만의 자치공간(총학생회실 옆 생활방, 소극장 앞 231호, 노조위원회 앞 220호)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남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는 총학생회실 옆 생활방을 제외하고 잠겨있는 220호와 책상 3개가 전부인 231호는 개방이라고 하기엔 부족해보였다. 이 밖에 버스정거장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실험실습비 확대 및 공개, 강의평가 방법 개선, 영어강의 헐성 제고 등의 공약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힘들었던 만큼 배운 것이 많은 1년이었다”며 “다음 총학은 학생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